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569호
2016. 7. 18

정책동향

- 건설 안전사고 저감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제10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

시장동향

- 5월 국내 건설 수주 25.5% 감소

산업정보

- OPEC 연간 통계 보고서 주요 내용 분석
-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건설논단

- '아베노믹스' 건설 투자가 韓 건설에 던지는 숙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건설 안전사고 저감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시공사 중심에서 발주자가 선도하는 총체적 안전관리 지향해야 -

■ 국내 건설업은 전체 산업에서 안전관리 수준이 가장 낮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 건설업 재해율은 2008년(0.64%) 이후 계속 나빠지고 있는 추세임. 참고로 2015년 산업 전체 재해율 평균은 0.5%임.
 - 건설업 재해율이 가장 나빴던 해는 2013년으로 0.92%였으며, 2015년은 0.75%로 나아지고 있으나 2008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건설업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493명으로 전체 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미국 건설업 역시 사망률은 전체 산업의 2.7배임. 영국 건설업 사망률은 미국의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의 연도별 재해율, 사망만인율 등 대표적 지표가 지난 10년 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건설 안전관리는 매번 달라지는 원·하도급 생산 구조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 습속(習熟) 효과 낮아

- 건설업의 원·하도급 생산 구조와 매번 달라지는 하도급자와 근로자로 인해 안전관리 습속 효과는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실정임. 이는 공동주택 부문의 하자관리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
 - 건설현장은 기업 규모에 따라 수개에서부터 수백 개에 이르며, 지역적으로도 산재되어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안전관리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최근 건설 사업은 안전 법률을 지키는 수준만이 아니라 기업과 사업의 경쟁력과 이미지 차원에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음.
 - 미국 건설산업연구원(CII,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의 회원사로 있는 글로벌 수준의 발주자와 건설기업이 미국 건설산업의 전체 재해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안전관리 주(主) 법률인 『산업안전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이 고용노동부 및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통하여 제시됨.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은 총체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기업 혹은 사업에 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징벌적 조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
 - 대표적으로 법령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산재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망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대폭 높이는 안을 내놓았음.
 - 처벌 강화가 산업 안전 및 보건 기준 준수 정도를 제고하는 데 유효한 수단임은 분명하지만, 비교법적으로 볼 때 독일, 일본과 같이 형량이 높지 않음에도 높은 산업 안전 보건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사고의 원인과 형태가 사고마다 다종다양하고 여러 가지 요인과 변수가 있으며, 산재 예방 의무 주체로는 사업주 외에 발주자, 근로자, 제3자 등이 있음.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일정한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원도급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임.
 - 『산안법』의 기본 배경인 ‘사업주 책임주의’가 ‘사업주 무한 책임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음. 오히려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해서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구조가 바람직함.
 - 특히, 『산안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관리 장소의 확대 안(20개 유해 위험 장소→모든 장소)은 건설업의 특징과 실효성을 감안할 때 재검토해야 함.

■ 국내 건설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사이클의 연계성 강화”와 “발주자가 선도하는 총체적 안전관리”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시공자 중심 안전관리 기조’에서 ‘예방적이고 총체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되어야 함. 여기에는 발주자와 하도급자, 그리고 근로자까지 이르는 건설 참여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안전관리의 범위 역시 기획-설계-시공 단계로 확장하여 부적절한 기획 및 설계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영국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종합안전관리자제도의 도입과 기획-설계 단계부터 안전 위해 요소를 고려하는 ‘Design for Safety’ 개념을 건설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함.

최석인(기술정책연구실장 · sichoi@cerik.re.kr)

제10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I)¹⁾

- 투자 지연 중인 5개 프로젝트 지원, 3.6조원 투자 효과 기대 -

■ 투자 기회 창출을 위한 대책 발표

-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고용 창출 기회 다변화와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 정부는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투자 심리 위축 등을 극복하고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자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함.
 - 주요 내용은 ①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한 투자 창출, ② 新유망시장으로 대두되는 할랄·코셔 연관 산업 육성 및 생활 패턴 변화와 기술 발전 등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③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벤처,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등 3대 분야로 구성됨.
- 이 중 5개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이 대부분으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장대기 프로젝트란 기업의 투자 계획은 있으나, 규제 또는 기관 간 이견 등으로 현장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의미함.
 - 정부는 5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개발사업 활성화로 약 3.6조원에 이르는 투자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현장대기 5개 프로젝트와 지원 내용

- 의정부시는 K-pop, 콘텐츠 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는 복합 문화단지 조성을 추진 중임. 그러나 사업지가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었음.
 -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 지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결도로 확충, 관광특구 지정 등 지원 계획을 추진키로 하였음. 약 1.7조원 규모 투자 효과가 기대됨.
- 충북 진천 산업단지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 공장이 증설 중임. 그러나 전력

1) 본고는 2016년 7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총 3회 게재 예정으로 본고는 1회 차임.

공급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완공시 제품 생산 차질이 우려됨.

- 이에 26개월로 예정되어 있던 154kV 선로 설치 공사를 11개월로 단축하고 공업용수도 보강하며, 폐수처리시설 신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키로 하였음. 약 1조원 정도의 투자 효과가 기대됨.
- 천안시 일대 화장품 전용 산업단지는 원료 재배, R&D, 제조, 체험, 쇼핑을 아우르는 화장품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추진 중임. 그러나 천안~논산 고속도로 접근성 등 인프라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음.
 -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남천안IC 통과 후 복합단지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또한 상수원 보호를 위한 방류수 수계 변경,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 보 완책이 마련될 예정임. 약 4,300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마산합포구 일대 로봇랜드는 울트라건설 부도로 중단된 후 작년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추진 계약을 체결함. 현재 부지 확보, 콘텐츠 개발, 접근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근 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국도 5호선 창원 구간 진입도로 조기 개 통, 산업통상자원부 중심 TF 구성을 통한 콘텐츠 구축 등이 계획되었음. 이들 지원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4,000억원이 넘는 민간 투자 계획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대관령 일대에 3.5km 구간을 선로로 연결하는 한국관 ‘융프라우 산악열차’ 사업이 포함된 산악관광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 중임. 그러나 산지 관련 개별법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백두대간보호법』, 『국유림법』, 『초지법』 등 대관령 일대에 적용되는 규제의 일괄 완화를 추진 중 임. 이와 동시에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체를 운영키로 하였 음.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도 많아 1,000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예상됨.

■ 기대 효과

- 앞선 9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총 60조원 규모, 37개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기업과 지 자체 건의에 따라 발굴되었으며, 이 중 절반 가량이 착공되었음.
 - 현장대기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보면 완공 4건(3.8조원), 진행 중 15건(26.2조원), 미착공 18건 (30조원)임.
- 미착공 프로젝트들은 올 하반기 8건, 2017년 이후 10건 정도 착공 예정임. 또한 최근 지 방·낙후 지역에 대기 중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어 지방 건설기업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최수영(연구위원 · sooyoungchoe@cerik.re.kr)

5월 국내 건설 수주 25.5% 감소

- 올 들어 가장 큰 낙폭 기록, 건축 수주 위축으로 공공과 민간 모두 감소 -

■ 5월 국내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25.5% 감소

- 2016년 5월 국내 건설 수주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25.5% 감소한 9조 4,127억원을 기록함.
 - 건설 수주는 지난 4월의 19.3% 증가를 이어가지 못하고, 5월에 다시 25.5% 하락함.
 - 결국,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일정 기간 동안 증가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매달 등락을 반복함(-3.9% → 84.3% → -6.3% → 19.3% → -25.5%).
 - 다만, 5월 실적으로는 자료가 작성된 지난 1976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9조 4,127억원을 기록해 금액 자체는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됨.

■ 공공부문, 건축 수주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7% 감소

- 공공 수주의 경우 토목 수주는 양호했으나, 건축 수주가 부진하여 전년 동월 대비 13.7% 감소한 2조 1,208억원을 기록, 2개월 연속 감소함.
 - 공공 토목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한 1조 3,678억원을 기록, 3개월 만에 반등함.
 - 주택 수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허가 물량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21.6% 감소한 2,413억원을 기록함.
 - 한편, 비주택 건축 수주도 전년 동월 대비 37.2% 감소한 5,117억원으로 부진하였음.

<표 1> 2016년 5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5. 5월	12,639.3	2,458.4	1,336.2	1,122.2	308.0	814.3	10,180.9	374.0	9,806.9	5,853.4	3,953.6
2016. 5월	9,412.7	2,120.8	1,367.8	753.0	241.3	511.7	7,291.9	499.9	6,792.0	4,594.3	2,197.7
증감률	-25.5	-13.7	2.4	-32.9	-21.6	-37.2	-28.4	33.7	-30.7	-21.5	-44.4
2015. 1~5월	47,111.2	9,637.0	6,731.6	2,905.4	1,053.2	1,852.3	37,474.2	3,217.3	34,256.9	23,906.3	10,350.6
2016. 1~5월	49,143.2	11,150.5	6,711.0	4,439.5	2,717.8	1,721.8	37,992.7	3,775.0	34,217.7	21,473.1	12,744.6
증감률	4.3	15.7	-0.3	52.8	158.1	-7.0	1.4	17.3	-0.1	-10.2	23.1

자료 : 통계청, 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 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 ■ 민간부문, 건축 수주 위축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4% 감소

- 5월 민간 수주는 주택과 비주택 건축 수주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4% 감소한 7조 2,919억원을 기록함.
 - 민간 토목 수주는 지난해 수주가 부진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7% 증가한 4,999억원을 기록함.
 - 주택 수주는 재건축재개발 수주가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21.5% 감소함. 비록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어도, 5월 수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4조 5,943억원을 기록, 금액 자체는 양호했던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비주택 건축 수주는 상업용 오피스 수주의 위축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4% 감소함.

■ ■ 공종별로 건축 공종은 대부분 감소, 토목은 철도 및 궤도 부진

- 건축 공종의 경우, 공장 및 창고 수주를 제외하고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임.
 - 공장 및 창고는 89.2% 증가해 양호했으나, 주택 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하여 전년 동월 대비 21.5% 감소함. 사무실 및 점포와 관공서도 각각 40.5%, 66.9% 감소하였음.
- 토목 공종의 경우, 철도 및 궤도를 제외한 나머지 공종은 양호했음.
 - 철도 및 궤도는 전년 동월 대비 91.3% 급감한 411억원으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임.
 - 반면, 도로 및 교량은 공공 발주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민자 사업도 일부 발생해 전년 동월 대비 41.7% 증가하였음.
 - 한편, 항만 및 공항은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공사” 영향으로 올해 들어 가장 양호한 3,679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10.1% 급등함.
 - 기계 설치와 토지 조성 공종도 각각 19.4%, 108.9%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임.

<표 2>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항만 및 공항	기계 설치	토지 조성	상하수도
2016. 5월	4,835.6	1,331.9	631.4	546.5	199.5	451.1	41.1	367.9	280.3	257.8	209.0
증감률	-21.5	-40.5	89.2	-66.9	-63.4	41.7	-91.3	110.1	19.4	108.9	139.2
2016. 1~5월	24,190.8	7,793.9	4,250.8	2,013.1	408.6	2,856.1	507.2	999.6	2,270.5	1,415.4	514.8
증감률	-3.1	20.3	160.5	-33.9	-60.9	104.6	-78.3	126.7	-5.0	45.1	49.7

자료 : 통계청

박철한(책임연구원:igata99@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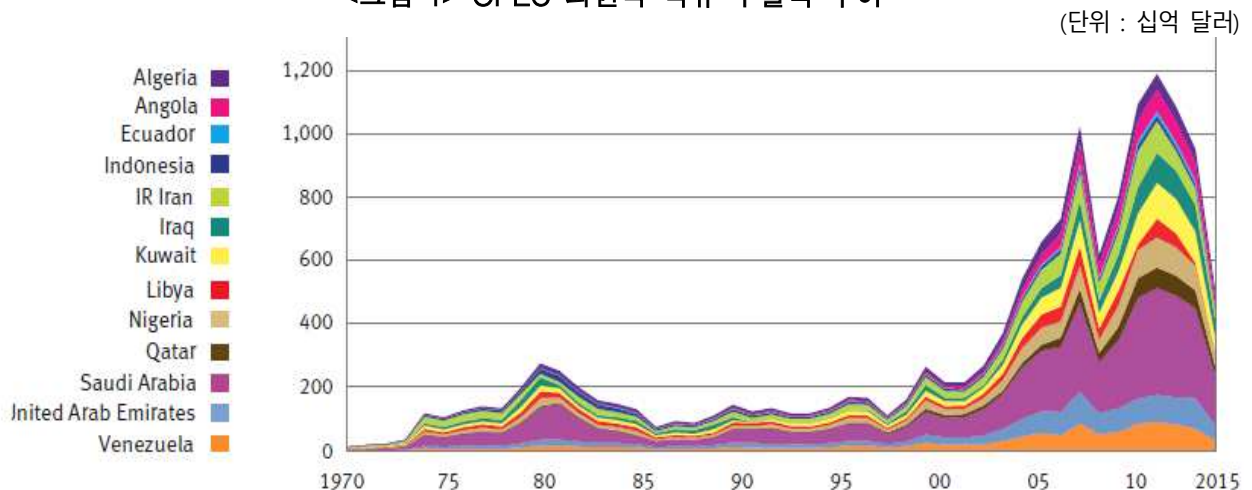
OPEC 연간 통계 보고서 주요 내용 분석

- OPEC 회원국의 2015년 석유 수출액, 전년 대비 45.8% 급감 -

■ OPEC 회원국의 2015년 일일 평균 생산량, 3.23천만 배럴로 2014년 대비 3% 증가

- 2015년 세계 석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일일 평균 1.75백만 배럴 증가해, 최근 10년 간 두 번째로 높은 증가량 기록
 - 미국은 전년 대비 일일 평균 0.72백만 배럴이 증가했으며, 영국도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일일 평균 0.1백만 배럴 이상 증가하였음.
 - 2015년 일일 평균 석유 생산량 순위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0.19백만 배럴로 1위를 차지했고, 러시아(10.11천만 배럴)와 미국(9.43백만 배럴)이 각각 2위, 3위를 기록함.
- 2015년 OPEC 회원국의 석유 수출액은 5,1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8%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최저치 기록
 - 2014년에 총 2,381억 달러 규모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던 전체 OPEC 회원국이 2015년에는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996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함.
 - 2014년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이 2015년 한 해에만 약 47% 추가 하락하면서, OPEC 산유국들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그림 1> OPEC 회원국 석유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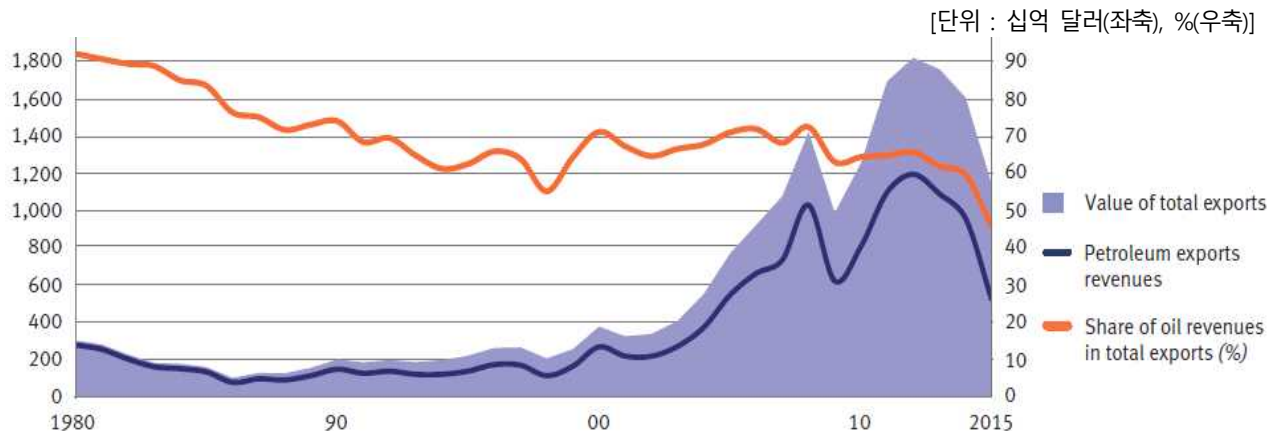


자료 : OPEC

■ 국제 유가 하락으로 전체 수출액 중 석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저치 기록

- OPEC 회원국의 2015년 수출 총액은 2014년 대비 29.2% 감소한 1.14조 달러 기록
 - 2014년 3,423억 달러를 기록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액은 2015년엔 2,054억 달러로 약 40% 감소하였음. 베네수엘라, 쿠웨이트 등도 2014년 대비 각각 50% 이상 급감하였음.
 - OPEC 회원국별 수출액 급감 주요 원인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수출 감소임. 사우디의 경우 2015년 석유 수출액은 1,579억 달러로 2014년 대비 44.5%나 급감하였으며 OPEC 회원국 모두 전년 대비 평균 50% 이상 석유 수출액이 감소하였음.
- OPEC 회원국 전체 수출액 중 석유 매출 비중은 2012년 65.6%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하락해, 2015년 처음으로 50%를 하회하는 45.6%를 기록함.
 - 석유 수출액 비중 감소는 2014년에 평균 배럴당 96.29달러였던 유가가 2015년에는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배럴당 49.5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임.

<그림 2> OPEC 회원국 수출 규모와 석유 수출 비중 추이



자료 : OPEC.

■ 배럴당 50달러가 새로운 노멀(New Normal)이 될 경우의 시장 변화 대비 필요

- 현재 배럴당 45달러 수준인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OPEC 회원국들은 저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전략 변화를 추진할 것임.
- 관련 국가에 진출한 국내 건설기업들은 시장 환경의 변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전략의 수립·추진이 필요함.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 벤치마킹을 위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

■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

- 일본 정부는 '일본부흥전략 2015' (2015. 6. 30. 각료회의 결정)를 통해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의해 가속화되는 산업 및 경제 변화에 민간 기업이 따라갈 수 있도록 적절한 투자와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민간 공통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같은 해 8월 관련 부처와²⁾ 학계가 공동으로 신산업 구조 비전 마련을 위한 실무 기구인 '신산업구조부회(新産業構造部會)'를 설치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활동을 시작함.
- 금년 4월에는 신산업구조부회 제8차 회의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을 발표함.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새로운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사회 구조 변혁을 위한 4대 기술기반 산업³⁾

- 일본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공장 자동화 환경을 넘어 인공지능이 대량의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최적화가 가능해지는 새로운 산업 환경으로 해석하고 있음.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을 4대 기술기반 산업으로 선정하였음.
 - IoT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의 데이터화 및 자유로운 전달 가능
 -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
 - 인공지능(AI)은 자율 학습을 통해 인간을 뛰어넘는 판단 가능
 -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작업의 자동화 가능
- 4대 기술기반 산업과 데이터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모색함.
 - 4대 기술기반 산업과 금융 기술 및 금융시장 정보의 연계를 통해 자산 운용에 대한 자동 컨설팅 기능 제공이 가능함.

2) 경제산업성, 내각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청, 총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3)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新産業構造ビジョン'(신산업 구조 비전).

- 4대 기술기반 산업과 의약 개발 기술 또는 의료 정보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의약품 및 미용·건강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이 가능함.
- 또한, 4대 기술기반 산업과 사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보험 및 위험에 대한 사전 경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4대 기술기반 산업과 에너지 부하 관리 기술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 공급 효율화 서비스 등의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7대 추진 전략

- 지난 4월 27일, 일본은 ‘데이터 활용과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등을 포함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한 7대 추진 전략을 제시함. 7대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음.
 - ① 데이터의 활용과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② 인재 육성 및 고용 시스템의 유연성 향상, ③ 이노베이션 및 기술 개발의 가속화, ④ 금융 조달 기능의 강화, ⑤ 산업 및 취업 구조 전환의 원활화, ⑥ 제4차 산업혁명을 중소기업 및 지역 경제에 원활히 보급, ⑦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사회 시스템 고도화

■ 시사점

- 일본이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IT 분야에만 국한하고 않고 경제 및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는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 기업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업간 벽을 허물고 산업간 연계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IT와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자동주행 시스템 및 데이터 플랫폼의 사업화 등 모색
 - 한류와 의료 정보 기술 활용을 위한 맞춤형 위한 의료 정보 제공
 - 4차 산업혁명에 알맞은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 강화 등 교육 시스템 개편
 -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지원 방안 정비 등
- 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각 전략마다 예산 및 기금의 확보 방안을 포함한 시계열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임기수(연구위원 · kslim@cerik.re.kr)

‘아베노믹스’ 건설 투자가 韓 건설에 던지는 숙제

2016년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 대규모 재정 정책에도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의 한계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2015년 경제 성장률인 0.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조한 경제 성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실패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지난 20여 년 간의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에서 시도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를 지닌다. 아베노믹스 건설 투자를 거시경제 회복을 위한 단기적 관점의 재정 정책으로만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도 건설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아베노믹스는 건설 투자를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성뿐만 아니라 내각부에서도 「국가전략특구」와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응하기 위한 액션 플랜인 「개혁2020」을 주요 성장 전략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자율 주행차, 드론, 로봇 기술 등 ICT 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건축 규제 등 인프라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일정 수준의 인프라가 확보되었지만 신칸센 신설과 같은 대규모 신규 투자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기반시설의 투자 및 정비 없이는 장기적 관점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저성장기 건설 투자 정책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미래 성장을 목표로 지역 집중, 예산 집행의 효율을 추구하고 있다. 중앙 집중과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해묵은 논쟁은 일본에서도 여전하다. 그러나

도쿄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도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책 집행 방식도 중앙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간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아베노믹스라는 우산 아래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설 정책은 내각부, 총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지자체 등으로 전 부처를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처간 협업은 「개혁2020」과 같은 기술 중심 정책, 「국가전략특구」와 같은 지역 중심 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건설시장은 변화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 등 적극적인 건설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건설시장이 장기 침체에서 탈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도쿄를 중심으로 민간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 고령화, 시설물의 노후화,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대내외적 환경은 일본과 다르지 않다. 우리도 저성장기 초입에 진입하고 있다. 2년 연속 2%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눈앞에 다가온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며 건설 투자는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가치임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